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우리나라 보수정당에는 ‘친박’·‘친이’라는 두 계보가 있다. 친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인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주의 성향 노선이다. 반면 친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신자유주의 성향 정치를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다. 52년생으로 형 만기가 2039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된 반면, 11년이나 더 고령으로 2037년 이 만기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수행 기간이 좀 더 길고 건강이 나빴다는 것이 사면 이유였지만, 친이 입장에서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면 직후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이었다. 27일 쿠기뉴스 데이터리서치조사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65.2%가 잘했다(잘못했다 31.8%)라고 한 반면,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55.4%가 잘했다(잘못했다 39.3%)라고 했다. 왜 그럴까? 혹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고,

친박·친이, 대통령과 사면 그리고 윤석열

여성이기에 연민의 정이 더 컸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두 대통령 즉 친박과 친이의 정치 노선 차이일 것이다.

두 진영의 정치 노선 차이는 두 전 대통령의 과거 선거 캠페인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명박은 약체 정동영을 상대로 시장경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부자 되세요’라고 하고, 새벽 국밥집에서 육을 들으면서 ‘경제나 살려라’는 캠페인을 펼쳤다. 반면 박근혜 캠페인은 강력한 경쟁자였던 문재인을 상대로 냉혹한 시장경쟁에 대해 ‘법치사회’ ‘원칙이 선 자본주의’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국민 행복’으로 맞섰다. 그 결과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를 이겼다. 두 사람의 선거 캠페인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은 국가나 민족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앞세우는 냉혹한 무한 경쟁 체제 즉 신자유주의였다면, 박근혜는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면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 행복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에 가깝다. 한마디로 정권하면 이명박은 선사후공(先私後公), 박근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였다.

실제 두 대통령은 임기 내 정책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경쟁 원리를 놓고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심지어 교육 분야에까지 이를 도입하여 평준화를 축소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확대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이외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경쟁 체제 도입에 신중한 편으로 평준화 정책을 유지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이 같은 두 주장은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아마도 냉혹한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선사후공을 주장하는 정치인보다. 경쟁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라면서 선공후사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훨씬 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는 인기가 없었다. 게다가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앞세웠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반영되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친박·친이 노선이 후보들의 운명을 갈랐다. 최자형이 등장했을 때, 지지층에서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최자형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들고, 국가와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입장에 서는 순간 지지율이 꺾였다. 학습효과일까? 윤석열은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라고 정답을 맞혔다. 그러나 평소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을 보면 자유주의에 가깝다. 그리고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대다수가 친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자유주의 정책을 썼던 인물 그림도는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낮다.

그렇다고 박근혜 마케팅 했던 친박 정치인들이 비교우러라는 말은 아니다. 적어도 친박과 친이로부터 자유로웠던 윤석열이 보수정당 후보가 되었다면, 친이와 친박의 과거 정책 노선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내 정치인의 역할이 그려져야 했다. 아쉽게도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콘셉트(concept)나 그림이 안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이 최근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칼럼

끝은 시작에 달려 있다



최현열  
광주연합회 담임목사

많을수록 하루하루가 특별하지도 않고 비슷한 삶의 반복으로 이루어 진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삶의 반복이다.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 일상 이 지속되면 기억할 것도 없고 추억할 것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요즘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느낄 것만 같다. 여행도, 만남도, 잔치도,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생각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특별히 각자가 처한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건강하고 행동한 사람들은 밝은 눈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목은해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병 들고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것이 더없이 처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내일이 오늘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더 많이 닮아 가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올해가 작년과 달리 변화와 성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셨다.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finis)인데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다는 증거이다.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그는 환호하듯이 외친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정해야 한다. 신앙인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2021년 마지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2022년을 어떤 계획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새해의 결말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 코로나로 영망이 되고 이젠 지쳐 버려 생각하기도 싫고 지워 버리고 싶은 한 해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은 오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시간들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끝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끝은 시작에 달려 있다.(Finitis origine pendet) 그리고 내일의 해는 오늘 밤과 손을 잡고 있다.

기고

소통으로 싹트는 광주시의 건축·건설 문화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회장

하는 도시 기본계획, 건축 기본계획, 경관 기본계획, 주택 종합계획, 안전관리 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 계획을 비롯하여 조례·지침·정책 연구 등 도시·건축 선언이 추구하는 가치·계획·목표가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제 매뉴얼 이행과 함께 광주시가 추진하는 건축·건설 관련 정책에 대해 관련 단체와 작·간접적으로 관계된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얼마 전 이용섭 시장이 직접 필자를 비롯한 우리 지역 건축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건축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건축 단체 대표자들은 건축 관련 개별 심의에 따른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과 시 건축 담당 부서의 인·직성 제고를 위한 부서명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회색 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 광주만의 도시 공간이 조성되고 품격 높은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 우리 건축 단체들과 여러 전문가들은 광주시 건축 도시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도시재생국장과 및 해전부터 정례적인 주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시 정책 방향에 따른 치열한 공방도 오고 가지만, 모두 광주시 발전과 시민들을 쾌적한 삶을 위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을 맡고 광주시 건축·건설 단체와 관계 전문가, 시의

원 등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지역 건축·건설 업계의 건의 사항과 고충을 적극 수렴하며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시는 지난 8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순수한 시민 103명으로 구성된 ‘2040 광주 경관계획 시민참여단’으로부터 광주 도시경관의 미래 비전에 담긴 시민 제안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관 계획 소양 교육과 세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광주시 도시경관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시민제안서 10개 조문을 도출했는데, 시는 전달받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2023년 1월까지 2040 광주 도시경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장이 시장 운영에 있어 이와 같이 시민들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는 또한 광주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도시로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상상속 건축물 ‘바벨탑’은 결국 불신과 오해 속에 서로 다른 언어들로 소통하지 못한 인간들에 의해 완공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제 쌓아 올리기 시작한 광주시의 건축·건설 문화 미래 비전이 시민과 전문가 단체들의 지속적인 협력·소통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社說

여전히 투자 편중 ‘예타 제도’ 개혁 절실하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타 제도가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타 제도를 개선하면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역낙후도 지수의 지표를 8개에서 36개로 늘렸지만, 지역낙후 비중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엇그제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보니 예타 면제 및 통과 사업이 이전처럼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됐다. 예타를 통과했거나 면제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11건, 사업비로는 11조9972억 원인데 광주·전남 비중은 고작 2.13% 수

준에 그쳤다. 지역에선 광주구치소 신축(1193억원)과 광양항 묘도 수도 항로 직선화사업(1374억 원)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반면 부산 전체 신항 1단계 건설 사업은 사업비가 7조59208억 원이나 되는데도 예타를 통과했다. 10년간 3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현세를 쏟아부어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광양항 투자에 인색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완도에 추진 중인 1678억 원짜리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경제성을 입증해야 국비를 받을 처지다.

광주일보보 그동안 1년 넘게 예타 제도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왔다. 경제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자본이나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도 충분 결과를 보니 예타 면제 및 통과 사업이 이전처럼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됐다. 예타를 통과했거나 면제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11건, 사업비로는 11조9972억 원인데 광주·전남 비중은 고작 2.13% 수

LH발 부동산투기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가 해를 넘기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된 투기 사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11명(23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도 5명을 구속하는 등 2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 142억 4000만 원 역시 추징·보전 조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 공무원 A씨는 광산구 구부 주택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127㎡를 3억40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적발됐다.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동구청 6급 공무원 C씨 등 13명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37건, 전남청은 67건의 수사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면서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광주지법도 투기 사범들에 대해 출몰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저수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직면했다.

집 없는 서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고려할 때 투기로 적발된 공직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투기 용두사미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부동산 투기 수사가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침대축구’라는 말이 느닷없이 정치판에 등장했다. ‘침대축구’는 자기 팀이 유리한 점수로 이기고 있을 때 작은 몸싸움에도 일부러 넘어져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흔히 중동축구를 비난할 때 쓰이는 이 말이 최근 대선판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대선에서 TV토론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최소 횟수 세 차례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 밖에 안 된다”면서 “정체

뭇개 조정할 것인가가 정치’라며 점잖은 훈계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TV토론은 중요한 선거 절차 중 하나였다. 국민은 토론을 통해서 후보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감으로 판단하며, 이성적으로 수용한다.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토론은 후보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

대선 ‘침대축구’

예의라고도 할 수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침대축구는 스코어가 뒤

집하면 급세 사라진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와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축구로 말하면 이미 역전골이 터진 상황이다. 토론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지만, 이재 ‘부자 몸조심’할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유 후보의 ‘침대축구’ 전략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드러누운 채로는 공을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유재관 편집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수진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체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